

# 2025년 도지사인증상품 27개 선정

전북자치도, 농축수산물 5 · 전통가공식품 18 · 공산품 4개 대상 인증서 수여... 온라인 마케팅 · 브랜드 홍보 등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각종 상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한 27개 상품을 도지사 인증상품으로 신규 선정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중훈 경제부지사를 비롯 기업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신규로 선정한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27개 상품에 대한 인증서를 수여했다.

분야별로는 농축수산물 5, 전통·가공식품 18, 공산품 4개이며, 지역별로는 전주 3, 군산 6, 익산 3, 정읍 3, 남원 2, 김제 1, 완주 2, 진안 2, 임실 2, 고창 3개 상품이 선정됐다.

선정된 27개 상품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말까지 3년간 인증이 부여되며, 인증기업에게는 인증서와 인증현판이 수여되며,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통한 판촉사업 등을 지원한다.

또한, 브랜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품질검사 및 시설·위생환경 점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전북 대표 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날 수여식과 함께 인증상품 전시도 이뤄졌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인증제도'는 품질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중훈 경제부지사를 비롯 기업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신규로 선정한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27개 상품에 대한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우수상품 발굴·육성하기 위해 도가 매년 선정·관리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24일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계획'을 공고한 뒤 시·군으로부터 46개 상품을 접수받아 신청자격 적격 여부, 품질인증 사항, 매출액 등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9월 25일부터 10월 25

일까지 약 5주간 진행된 현지 실사에서는 심사위원들이 기업을 직접 방문, 경영인의 기업관 및 의지, 시설 및 위생환경, 원재료 등에 대해 현장 확인한 바 있다.

이어 11월 15일 '도지사인증상품 최종 선정관리위원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의 브랜드 이미지에 적합하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대외경쟁력을 확보한 27개 상품을 최종 선정했다.

도는 이번에 선정된 인증상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의 마케팅 지원과 브랜드 홍보가 지원된다.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여러분이 만든 인증제품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만큼 소비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며, "도지사인증제도를 통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사전 컨설팅감사로 적극행정 문화 확산

제도 · 규정 불명확한 사안에 대한 공무원 지원 강화

민원 처리까지 확대... 공무원 적극행정 뒷받침 특목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도나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나 감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도는 이 제도를 통해 2023년까지 약 420건의 사안을 처리하며 도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범위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원이 포함된 인·허가 업무까지 확대하여 공무원이 소극행정을 탈피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사례 중 하나로,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활용되지 않으면서 해당 토지의 환매를 요구하는 민원

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해당 사안은 환매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은 관련 법령과 관례를 검토한 후, "사업부지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환매권 행사 기간이 10년을 초과했다"는 답변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민의 불만을 해소했다.

또한, 감사위원회 사무국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며, 공무원이 현장에서 즉각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현장 상담창구'를

마련했다. 기존 종합·기술감사 대상 5~6개 시군에서만 운영되던 상담창구를 2023년부터 전체 시군으로 확대해 도민과 공무원의 고충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12월 초까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 총 54건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제도와 규정이 불명확한 고충 민원에 신속히 의견을 제시해 도민의 불만을 줄이고 공무원 적극행정을 뒷받침했다.

김진철 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공직자가 도민의 편에서 적극적 업무 처리를 위해 제도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어려움을 신속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 도, 공직기강 확립 · 조직쇄신을 위한 직원 간담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공직기강 강화와 조직 쇄신을 위한 직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6급 이하 실무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의견을 교

환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 부지사는 "최근 고위공직자의 일탈로 조직이 어수선한 상황"이라며, "현재 공직기강 확립 및 조직 쇄신 방안을 마련 중이며, 실무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 자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만큼 국민과 도민을 위한 봉사의 자세가 필요하며, 지회고하를 막론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가 요구된

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직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비공개로 소통할 수 있는 내부 채널 신설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등 조직 내 소통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참신한 제안들이 눈에 띄었다.

/이만호 기자

## 새만금개발청, 스마트 메가시티 구축 '맞손'

새만금개발공사 · 스마트도시협회와 스마트 메가시티 구축 협약

새만금 · 주변 지역 연계 스마트도시 구축 기반 마련 협력 다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13일 스마트도시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과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스마트 메가시티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지정된 스마트도시 서비스 기관으로서 스마트도시 기술 자문, 기술 발굴, 국제협력, 해외 진출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등 기획 분야 협력, △스마트도시 서비스 실증사업 발굴 협력, △새만금 메가시티 스마트 모빌리티 연계를 위한 스타트업 발굴과 지원 협력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들은 다양한 첨단 스마트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혁신적인 지역으로 새만금을 개발하고 주변 도시와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새만금청은 스마트도시협회의 정보 제공과 기술 자문을 통해 선제적으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에 특화된 개

발계획과 서비스 방향을 모색하고, 차별화된 정주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 전역에 스마트도시 개발과 확산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성공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스마트도시협회에 필요한 관련 지식과 기술 지원을 요청할 것이며,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스마트 기술과 서비스를 결합한 혁신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기운 새만금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은 "새만금의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협약이 생각되며, 첨단 스마트 기술·서비스 등을 도시개발에 접목하여 새만금 내에 매력적인 도시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황귀현 스마트도시협회 전무이사는 "협회·회원사·스마트도시 민관 합동 연합(체) 등 협회 구성원이 보유한 우수한 스마트도시 기술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에 지속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 공유

도, 우수사례 공유 · 시상 · 지역자율형 사업 발전 방향 논의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동안 추진된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북사회서비스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과를 이뤘다.

성과 공유회에서는 각 분야에서 노력한 우수 시·군과 제공기관, 공무원 및 제공인력을 선정해 도지사상과 전북사회서비스원장상을 시상했다.

이어 우수 사례 발표와 성과보고를 통해 지역사회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가'에서 11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국내 최고 수

준의 사회서비스 제공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는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와 지역자율형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우수 사례로는 완주교육지원청협동조합의 '중장년 건강생활지원서비스', 톨타비팜의 '전북 장년 힐링지원 서비스' 등이 발표돼 주목받았다.

특히, 군산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철저한 현장 점검 활동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관심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국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도 첨단전략산업지원 특위 업무보고 청취

특위 활동계획안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2차 회의를 열고, 활동 계획안을 채택하고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첨단전략산업 지원 및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국회 활동, 지정추진 건의, 토론회 및 간담회 실시 등 앞으로 특위의 주요 활동에 대한 논의를 통해 활동 계획안을 확정했다.

또한, 집행부로부터 첨단전략산업 지원 및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활동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받으며, 특위, 집행부, 중앙정치권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전북이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김동구 위원장은 "전북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역량을 보여주었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새만금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전북이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만호 기자

## 도 한빛원전 대책 특위 활동계획서 채택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는 지난 12일 제2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도민안전실로부터 한빛원전 대응계획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운동목 도민안전실장으로부터 한빛원전의 운영 현황과 고준위특별법 제정 대응현황, 방재시설 및 물품 확보 현황, 방사능 감시체계 및 방재역량 강화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관련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이어갔다.

또한, 지방재정법(지역자원시설제) 개정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

책에 대해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조하며, 국회 및 중앙부처방문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만기 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 기조에 따라 원전 가동이 지속되면서 안전 문제와 관련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빛원전 대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도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안전 대책과 방재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

## “완주-전주 통합, 완주군민 의견 필요”

지난 13일 열린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 6명의 5분 발언이 잇따라 진행됐다.

먼저,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완주-전주 통합이 완주군민에게 꽃놀이패'라고 발언한 김관영 도지사를 향해 "이미 세 번에 걸쳐 통합이 무산되면서, 그리고 지금 또다시 통합에 대한 문제가 언급되면서, 분열과 갈등, 고통을 겪고 있는 완주군민에 대해 공감을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권요안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더 이상 완주군민을 상대로 한 흡수정책, 불통정책을 멈추고, 완주군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물아불이식 통합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은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북자치도청을 위해서 인적쇄신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4년을 돌아보면 전북자치도청의 고위공직자 및 출연기관장의 갑질, 비위, 업무태도 등으로

## 전북자치도 인적 쇄신 · 보훈 정책 확대 교내 학생 안전시스템 구축 등 발언 잇따라

도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소속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며 "특히, 자동차용합기술원장의 업무 태도와 규정 위반은 그 정도가 심각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전북자치도의 보훈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숨겨진 독립유공자 발굴 및 서훈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 독립운동가 서훈 확대를 위한



권요안 의원



김동구 의원



김성수 의원



김솔시 의원



박용근 의원



전동태 의원

법을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솔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전북자치도가 해양관할구역 획정법 제정에 대한 안일한 대응을 하면서, 자칫 충남과 전남에 우리도의 해양관할구역이 뺏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속도감 있게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등거리·중간선 등을 계산할 전산프로그램 확보를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장수·더불어민주당)은 학교 내 학생 안전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대안으로 비상벨 버튼을 누르면 바로 소방본부로 연결되는 음급구조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전동태 의원(진안·더불어민주당)은 고령인구 부양비용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구감소,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북 도민들이 부담하게 될 고령인구 부양비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현재 전북자치도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76개 사업 다수가 생애주기별로 잘 짜인 것처럼 보이나, 정작 인구감소와 지방소멸로 인한 가장 큰 문제인 '고령화에 따른 사회비용 증가'에 대한 대안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